세미나
토론내용

"현상태 수입개방시 양돈 포기할 수밖에"

정 형 기 (양돈협회 무안지부장)

정부는 UR협상에서 쇠고기의 의무수입량을 매년 2만톤씩 늘려 2000년에는 22만 5천톤을 수입하도록 했다. 이는 아주 잘못된 협상이다.

지금까지 볼 때 돈가폭락은 돼지의 과잉생산보다는 수입쇠고기 방출량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앞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매년 증가할 경우 돈가폭락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특히 돼지의 경우엔 1%만 남아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 내년부터 3%를 시작으로 매년 돼지고기 수입량을 늘리도록 되어 있어 돈가 하락은 불문가지이다. 그래도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돈 생산 장려금제도도 대부분 큰 농장만 혜택을 받고, 소규모 농가는 소외돼 있는데 이는 시정돼야 한다.

돼지 유통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국제규격돈을 생산하는 데 180~200일이 걸리고, 128,000원~132,000원의 생산비가 소요된다. 돼지 1두당 양돈농가는 1만원도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매시장의 중매인들은 두당 3,000원씩 수수료를 받아 1일 100두를 중매할 경우 3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런 불합리는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물가를 생산, 도매단계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정육점 등 소비지에서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

돼지고기가 육류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우전문 판매점에만 자금을 지원해주고, 양돈농가가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돼지고기 직판장 설치시에도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자가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몇년간 돼지가격은 생산비 또는 생산비 이하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돼지고기가 수입될 경우 양돈농가들은 2중 피해를 입게 된다.

대부분의 양돈선진국은 융자조건이 보통 10년거치 10년 상환이고, 금리도 2~3%선인데, 우리나라는 3년거치 7년상환, 5~8%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경쟁이 어렵다. 이 상태에서 수입이 되어 돼지가격이 하락하면 돼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융자받은 자금도 갚지 못하게 되고, 처가쪽 담보까지 잡고 융자받은 관계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마저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돼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은 자원활용, 환경공해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전액 보조해줘야 한다.

따라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